

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를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4(종전의 제2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및 제3조의2제1항”을 “및 제2항, 제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6을 제3조의6으로 한다.

제3조의3을 제5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4를 제3조의3으로 한다.

제6조의4를 제9조의5로 한다.

제7조를 제13조로 하고, 제4조의3을 제7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13조(종전의 제7조)제4호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의3을 제13조의2로 한다.

제7조의4를 제14조로 한다.

제8조를 제14조의2로 하고, 제5조를 제8조로 하며,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2조의3을 제3조로 한다.

제14조의2(종전의 제8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6조를 제9조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제6조의2를 제9조의2로 하며, 제4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6조의2(중전의 제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무선통신으로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녹음 등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전화

나. 인터넷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계약상대방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대부업자등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을 "(총자산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라 함은 10배를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변경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

입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⑦ 제4항·제5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및 변경의 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개인인 대부업자등은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순자산액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한국은행법」
7. 「농업협동조합법」
8. 「수산업협동조합법」

9. 「신용협동조합법」
10. 「산림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보험업법」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자기자본 등)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3(중전의 제2조의4)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3조제3항제4호”로, “제2조의5제4항”을 “제3조의4제4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3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며,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개인인 대부업자등 : 1천만원

2. 법인인 대부업자등 : 5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자기자본 및 순자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의6(중전의 제2조의6) 중 "법 제4조제8호"를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대부업등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4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3)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

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3조(중전의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3조제3항제4호”로 하고, “제2조의5제4항”을 “제3조의4제4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의5제4항”을 “제3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법 제3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보험업법」
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새마을금고법」
21. 「선박투자회사법」
22. 「수산업협동조합법」
23. 「신용보증기금법」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신용협동조합법」
26. 「여신전문금융업법」
27. 「예금자보호법」
28. 「외국인투자 촉진법」
29. 「외국환거래법」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은행법」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전자금융거래법」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주택법」
37.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38. 「중소기업은행법」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 「한국산업은행법」
43. 「한국수출입은행법」
44. 「한국은행법」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제9조(중전의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를 “법 제3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를 “법 제3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6조의2)제2호 중 “제6조제2항제3호”를 “제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9조의3을 제17조의2로 하고, 제6조의3을 제9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중전의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9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2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보호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를 제19조로 하고, 제6조의5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6.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6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제20조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의2(중전의 제1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0조의2(중전의 제11조의3)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을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20조의3(중전의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는”을 “은”으로 한다.

제11조의5를 제21조로 한다.

제12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보증금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등 : 5천만원

② 시·도지사등은 반복적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소 보장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보증금 예탁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보장금액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보증금 예탁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제

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 및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중전의 제7조의3)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채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채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제1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6(체납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사업

제20조(종전의 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제20조의2(종전의 제11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별표 4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본문 중 “지면, 방송 광고”를 “지면,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방송 광고”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사.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너.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버.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서.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처.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커. 삭제 <2009.8.5>				
터. 삭제 <2009.8.5>				

퍼. 삭제 <2009.8.5>				
허. 삭제 <2009.8.5>				
고.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노.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로.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모.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보.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소.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오.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초. 삭제 <2011.11.30>				
코.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토.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	법 제13조	영업 일부	영업 일부	영업 일부정지

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정지 1월	정지 3월	6월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3월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3월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호	20	100	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2호	50	250	500
다. 삭제 <2013.6.11>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호	20	100	200
마.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호	50	250	500
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호	50	250	500
사.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	200	500	1,000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3호	200	500	1,000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4호	50	250	500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4호	50	250	500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21조제2	50	250	500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항제5호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5호	200	500	1,000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6호	50	250	500
하.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2	50	250	500
거.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7호	50	250	500
너.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8호	200	500	1,000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8호	500	1,000	1,500
러.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6호	50	250	500
머.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9호	200	500	1,000
버.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0호	50	250	500
서.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7호	50	250	500
어.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8호	20	100	200
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1호	500	1,000	1,500
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9호	50	250	500
커.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2호	200	500	1,000
터.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0호	50	250	500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20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에 따른 등록, 등록기관 변경 및 등록갱신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등록요건의 심사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사실에 관한 보고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1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 업무
13. 법 제18조의8에 따른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정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7의 개정규정은 대부업자등이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갱신을 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한국은행법」 7. 「농업협동조합법」 8. 「수산업협동조합법」 9. 「신용협동조합법」 10. 「산림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보험업법」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신 설>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

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
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
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
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
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
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
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
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3조(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법 제3조제3항제4호-----

 ----- 제3조의4제4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

 ----- 제3조의4제4항-----

 -----.

② -----

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 이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시·도지사
등이 -----
-----.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변경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신 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⑦ 제4항·제5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및 변경의 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3조제4항-----

-----.

⑨ 법 제3조제5항 -----

-----.

1. 법 제3조제3항제1호-----

2. 법 제3조제3항제2호-----

3. 법 제3조제3항제3호-----

<신 설>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

⑩ 개인인 대부업자들은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순자산액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3조제7항-----

----- 시
·도지사등-----
-.

제2조의4(자기자본 등)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3(등록갱신 절차) ① ----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2
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
 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
 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
 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3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5(대부업등의 교육) ① ·

② (생 략)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
 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
 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
 용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
 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
 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
 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
 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

 ----- 법 제3조제3항
제4호-----

----- 제3조의4제4항-----

----- 시·도지사등-----

② ----- 제3조제
1항 -----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

·도지사등이 -----

---- 및 제2항, 제3조의2제1항

등"이라 한다)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1. ~ 5.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 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

-----.

1. ~ 5.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등은 -----

-----.

제3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

----- 건물(「건축법」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개월 ---
-----.

제5조(변경등록 등) ① -----

----- 시·도지사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
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영
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 (생 략)

<신 설>

<신 설>

----- 시·도지사
등-----.

④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
등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제5조의3 (현행 제3조의3와 같음)

제3조의5(자기자본) ① 법 제3조
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
다.

1. 개인인 대부업자등 : 1천만원
2. 법인인 대부업자등 : 5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3억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자기자본 및
순자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등록신청
일까지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
산한다.

제3조의7(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대부업등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련법령(제4조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신 설>

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
가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
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
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
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
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4. 「보험업법」
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새마을금고법」
21. 「선박투자회사법」
22. 「수산업협동조합법」
23. 「신용보증기금법」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25. 「신용협동조합법」
26. 「여신전문금융업법」
27. 「예금자보호법」
28. 「외국인투자 촉진법」
29. 「외국환거래법」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
31. 「은행법」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생 략)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생 략)

<신 설>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전자금융거래법」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주택법」

37.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38. 「중소기업은행법」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 「한국산업은행법」

43. 「한국수출입은행법」

44. 「한국은행법」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무선통신으로 거래상대방

<p><u>제4조의3</u> (생략)</p> <p><u>제5조</u> (생략)</p> <p><u>제6조</u>(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생략)</p> <p>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영업소의 주소와 <u>법 제3조제2항제6호</u>에 따라 등록된 광고</p>	<p><u>이 본인인지 여부 및 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할 것</u></p> <p>2. <u>제1호에 따른 음성녹음 등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u></p> <p>가. <u>전화</u></p> <p>나. <u>인터넷홈페이지</u></p> <p>다. <u>서면확인서(계약상대방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대부업자들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u></p> <p><u>제7조</u> (현행 제4조의3와 같음)</p> <p><u>제8조</u> (현행 제5조와 같음)</p> <p><u>제9조</u>(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법 제3조제3항제6호</u>-----</p>
---	--

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
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
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3. (생략)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
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
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
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
화번호를 말한다)

2. ~ 4. (생략)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생략)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
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
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
항제3호·제4호의 문구는 상호

2. 3. (현행과 같음)

③ -----

-----.

1. ----- 법 제3조
제3항제6호-----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

-----.

1. (현행과 같음)

2. -----

---- 제9조제2항제3호 -----

<p>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p> <p>3. (생 략)</p> <p><u>제6조의3</u> (생 략)</p> <p><u>제6조의4</u> (생 략)</p> <p><u>제6조의5</u>(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생 략)</p> <p>② (생 략)</p> <p><u>제7조</u>(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u>1.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u></p> <p>2.·3. (생 략)</p> <p>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p> <p>5. (생 략)</p> <p><u>제7조의2</u>(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p>	<p>-----</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3</u> (현행 제6조의3와 같음)</p> <p><u>제9조의5</u> (현행 제6조의4와 같음)</p> <p><u>제11조</u>(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 제6조의5와 같음)</p> <p><u>제13조</u>(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p> <p>-----</p> <p>-----.</p> <p><삭 제></p> <p>2.·3. (현행과 같음)</p> <p>4. -----</p> <p>-----</p> <p>-----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p> <p>-----</p> <p>5.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u>(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p>
--	--

<p><u>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u>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u></p> <p>2. <u>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u></p> <p>3. <u>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u></p> <p>4. <u>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u></p> <p>5. <u>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u></p> <p>② <u>금융감독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u>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p>	<p><u>정하는 배수"라 함은 10배를 말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u>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u></p> <p><u>제13조의2(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u> ① -----</p> <p>-----</p> <p>-----</p> <p>-----</p> <p>-----</p>
--	--

<p>일까지 관할 <u>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제7조의4</u> (생략)</p> <p><u>제8조</u>(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u>시·도지사는</u>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p> <p><u>제9조</u> (생략)</p> <p><u>제9조의2</u> (생략)</p> <p><u>제9조의3</u>(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p> <p>① <u>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u>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u>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u>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p>	<p>----- <u>시·도지사등</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4조</u> (현행 제7조의4와 같음)</p> <p><u>제14조의2</u>(공고내용 및 방법) ----</p> <p>----- <u>시·도지사등은</u> -----</p> <p>-----</p> <p>-----</p> <p>-----</p> <p>-----</p> <p>-----.</p> <p><u>제16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p><u>제17조</u> (현행 제9조의2와 같음)</p> <p><u>제17조의2</u>(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u>시·도지사등은</u> -----</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u>시·도지사등이</u> -----</p> <p>-----</p> <p>-----</p> <p>-----</p>
--	--

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
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
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시·도지사등은 -----

-----.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
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

1. 여신금융기관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
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
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신 설>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9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

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2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보호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신 설>

시한다.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

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6.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
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
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 손실을 끼칠 가
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
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
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
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시 · 도지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20조(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
---- 협회-----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법 제18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 · 도

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
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 설>

제11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도지사(제11조의3에 따
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
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의5 (생략)

<신 설>

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
항에 따라 별표 4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한다.

제2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도지사등-----

-----은 -----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 제11조의5와 같음)

제12조(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
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
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소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보증금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등 : 5천만원

② 시·도지사등은 반복적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소 보장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보증금 예탁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보장금액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보증금 예탁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제2항에 따른 보

제12조 (생 략)

<신 설>

<신 설>

증금의 예탁 및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
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 등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
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신 설>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

<신 설>

에 충당하면 남은 여지가 없음
이 확인된 경우

5.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
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
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
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
되는 경우

제1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
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
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의6(체납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2156-9475